김현지 불출석·관세협상 두고 공방… 與野 '배치기' 충돌도

2025 국정감사

李 대통령, 김현지 경내대기 지시
주진우 "의혹 제기에 與 '입틀막'"
정회 후 퇴장과정서 물리충돌도

한미관세협상 현금투자 회수 우려에
양해각서 1조 '상업적 합리성' 조항
팩트시트 발표시점 아직 가늠 어려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 정회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충돌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6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의원 간 물리적 충돌로 시작한 가운데,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감 불출석 논란, 한미관세협상 성과의 적절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출석했으나, 여야 합의 불발로 논란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실장에게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제1부속실장 보직 변경, 인사 및 재판 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고 했으나, 여당은 김 실장이 오전에만 출석하고 이석하는 조건을 내세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국회 결정에 따라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의 국회 운영위 출석이 가능하도록 경내 대기를 지시하셨고, 이에 1부속실장은 대통령의 경외 일정 수행 업무를 해야 함에도 대통령실에서 대기 중임을 알린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불출석으로 국감 당일 여야 간 긴장의 강도가 높아진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법률비서관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을 시작하자 회의장은 곧 시끄러워졌다. 여당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 의원이 운영위원에 소속된 것은 이해충돌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주 의원은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작년 국정감사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 의원도 운영위원으로 보임했다. 어디에다가 이해충돌 이야기를 하나"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 발언 이후 여야는 서로에게 고성을 지르며 비판했고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정회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을 빠져나가는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치기'를 하며 물리적으로 충돌하기까지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갑자기 이기헌 의원이 육중한 몸집으로 다가오더니, 회의장 문을 나가려다가 돌아선 상태인데 그대로 몸을 부딪혔다"며 "야당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백주대낮에 테러와 유사하게 폭력행위가 발생한 점에 대해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는 저인데 저에게 폭력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이어진 질의에서 곽규택 의원은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김현지 실장의 (국감) 100% 출석을 장담한다고 하셨다가 그 다음에 말이 바뀌셨다"며 "김 실장이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다고 말이 바뀌신 이유가 대통령의 지시 때문인가"라고 물었다.

우상호 수석은 "총무비서관은 과거 운영위 출석 전례가 있어서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부속실장으로 이동하게 된 것은 국감에 불출석하려 한 것이 아니라 김남준 대변인의 인사가 있어서 불가피했던 것이다. 부속실장은 국감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국회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특정 비서관, 특정 실장, 특정 인물이 실세다', '그 사람이 다 좌우한다', '그 사람을 다 통해야 한다'는 억측과 정치공세가 많다"고 하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시절 최순실로 알려진 최서원, 김건희 등 시스템이 아닌 비선 조직에 의한 인사, 국정 전횡을 목도했다"며 "이들은 시스템에 의한 국정 운영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들 시각으로 주장해서 억측과 공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자리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내란을 일으키고 감옥에 가 있다"고 했다.

APEC(에이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타결된 한미관세협상에 대한 질의도 줄이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거액의 대미 현금투자 회수에 대한 우려를 전하자 김용범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 제1조에 넣었다"고 답했다. 김용범 실장은 "투자 원리금 회수의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은 애당초 착수하지 않도록, 우리 협의위원회에서 동의하지 않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이 한미관세협상 결과를 정리한 팩트시트(설명 자료) 발표 시점을 묻자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금 협상 진행 중이고 막바지 단계에 있다"면서도 "발표 시점은 상대국이 있는 문제라서 일방적으로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적극재정 절실" vs 野 "'돈 풀면 경제 산다' 낡은 사고"

내년도 예산안 국회심의서 입장차
전액삭감한 특수활동비 두고 대립도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국회심의 첫째 날부터 확연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이 불가피하다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등을 이른바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삭감 추진을 예고했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질의에 돌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했다.

김 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과 미래성장 도약을 가능케 하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에 대해 ▲초혁신 경제 구현을 위한 재정의 적극 투입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또 "정부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인 27조 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했다"고도 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출범 후 적극재정 등을 통해 경제를 1%대로 끌어올렸다"며 "내년 예산안도 '경제활력예산'이고 확장 재정은 잠재성장을 달성하는 엔진"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라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확장재정의 큰 이유인 선심성 또는 국민해악 사업 예산은 안 된다"며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조2000억 원 상당의 지역화폐 등을 '상품권 공화국' 예산이라고 비꼬았다. 또 1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연금까지 끌어다 쓰려 한다며 '펀드 공화국' 예산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내년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을 본격화할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예산안에 담긴 핵심사업이 적기에 집행되지 못한다면 728조 원 예산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해 민주당이 감액예산안 단독처리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특수활동비 복원을 놓고도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은 이날 종합정책질의 전 기자회견에서 "야당일 때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불필요하고 여당이 되자 긴요해진 내로남불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시엔 비정상적인 지출에 의심이 충분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이라며 맞섰다.

예결위는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이어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5·18민주묘지 찾은 장동혁 '진땀'… 시민단체 "참배 절대 반대"

짧은 묵념 가지고 참배 일정 마무리
시민단체 "5·18 폄훼, 내란 옹호 인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지도부와 함께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국민 통합 메시지를 내고 참배하려 했으나, 장 대표를 기다리고 있던 시민단체가 "참배 절대 반대"를 외치며 강하게 저항했다. 결국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대로 된 참배 일정을 소화하지 못한 채 민주묘지를 빠져나갔다.

TK(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충청·세종 등을 다니며 예산정책협의회와 민심 현장 행보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 북구 소재 종합쇼핑몰 부지 방문, 광주 AI데이터센터 방문 등의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다.

장 대표는 광주를 떠나기 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늘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쓰러져 간 5월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 앞에 머리 숙이겠다"며 "5·18 민주묘역 조성, 5·18 특별법 제정은 모두 국민의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시절 김영삼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한 우리당 강령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과 조국 근대화 등 산업화 정신을 동시에 계승한다고 명기돼 있다. 저는 이 두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두 개의 위대한 기둥이라 확신한다"면서 "5월 정신이 대한민국의 긍지가 되고 역사의 자부심이 되도록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호남과 동행하겠다.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이 진정한 화합과 국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 진심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은 당 지도부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시민단체에게 둘러싸여 "내란범", "장동혁은 물러가라" 등의 비판 구호를 들으며 민주의문과 공식 헌화 및 참배 장소인 추념탑 앞까지 닿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장동혁(가운데) 국민의힘 당대표와 양향자(왼쪽) 최고위원이 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시민들에 의해 참배가 가로막히자 제단 옆에서 5초간 묵념하며 참배를 대신하고 있다. /뉴시스

결국, 장 대표는 헌화와 분향은 생략하고 5초 남짓한 짧은 묵념을 뒤로하고 민주묘지를 빠져나갔다. 기존 참배 일정에는 추념탑 참배 이후 윤상원·박관현 열사 묘역을 찾으려 했지만 이 또한 시민들의 격한 항의로 무산됐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와 광주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81개 단체는 "(장 대표는)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온 인물"이라며 "호남의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선적 행보', '진정성 없는 정치 쇼'"라고 반발했다. /박태홍 기자